

주요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전망

여 유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소득은 욕구실현의 가능성 영역과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즉, 소득은 먹고, 입고, 배우고, 일하고, 즐기는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개인(또는 가구)의 역량(capability)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의 불평등은 그것이 여타의 불평등, 예컨대 소비지출, 교육, 일자리, 부(wealth), 건강과 수명, 삶의 질 등의 불평등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빈곤을 포함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모든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며, 황금기(이차대전 전후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에서는 분배와 재분배의 다양한 기재를 통해 두터운 중산층과 비교적 낮은 소득불평등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서구 유럽과 북미 국가들 대부분이 1980년대 이래 소득불평등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1980년대 주요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 증감 실태를 구체

적으로 보여 주고, 이러한 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구화(globalization)가 복지국가의 소득불평등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지구화의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후 형성된 복지국가의 구조적·제도적 요인과 사회지출의 불가역성은 국가간의 불평등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효한 변수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중 분배 관련 지표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2차 자료이며, 사회지출은 OECD SOCX 자료이다. 또한 1인당 GDP(현재가치, 미국달러)는 UN 통계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주요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동향

주요 OECD 국가들의 1980년대와 1990년대 분배지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빈곤과 불평등 모두 감소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하지만 그 감소의 수준은 매우 미미하다. 여타 나라의 경우, 빈곤은 감소하였지만 불평등이 증가하였거나(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미국), 불평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빈곤이 증가하였거나(네덜란드, 아일랜드), 또는 빈곤과 불평등 모두 증가하였다(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캐나다, 영국).

1999)¹⁾ 등에 의한 복지국가 레짐 분류, 즉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n) 모델, 비스마르키안(Bismarck) 모델, 앵글로-색슨(Anglo-Saxon) 모델, 라틴(Latin Rim) 모델 분류에 의한 불평등도의 수준과 경향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불평등의 수준은 1980~2000년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스칸디나비아 < 비스마르키안 < 라틴, 앵글로색슨의 순을 유지하고 있다. 즉, 사

표 1. 주요 OECD 국가의 분배지표

레짐	국가	빈곤율		지니계수	
		1980년대	199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스칸디나비아	Belgium	4.85	8.35	0.230	0.273
	Finland	5.55	4.80	0.210	0.232
	Norway	6.80	6.65	0.232	0.245
	Sweden	7.10	6.55	0.224	0.237
	Netherlands	5.50	7.25	0.261	0.244
비스마르키안	Austria	8.65	7.85	0.227	0.267
	France	8.15	8.00	0.290	0.283
	Germany	6.85	8.25	0.263	0.274
지중해연안	Italy	10.40	13.40	0.298	0.336
	Spain	10.10	14.00	0.303	0.345
앵글로색슨	Australia	12.05	14.30	0.298	0.313
	Canada	11.20	11.35	0.282	0.300
	Ireland	11.50	14.40	0.328	0.325
	U.K.	11.85	12.90	0.320	0.344
	U.S.	17.95	17.40	0.337	0.362

주: 가치분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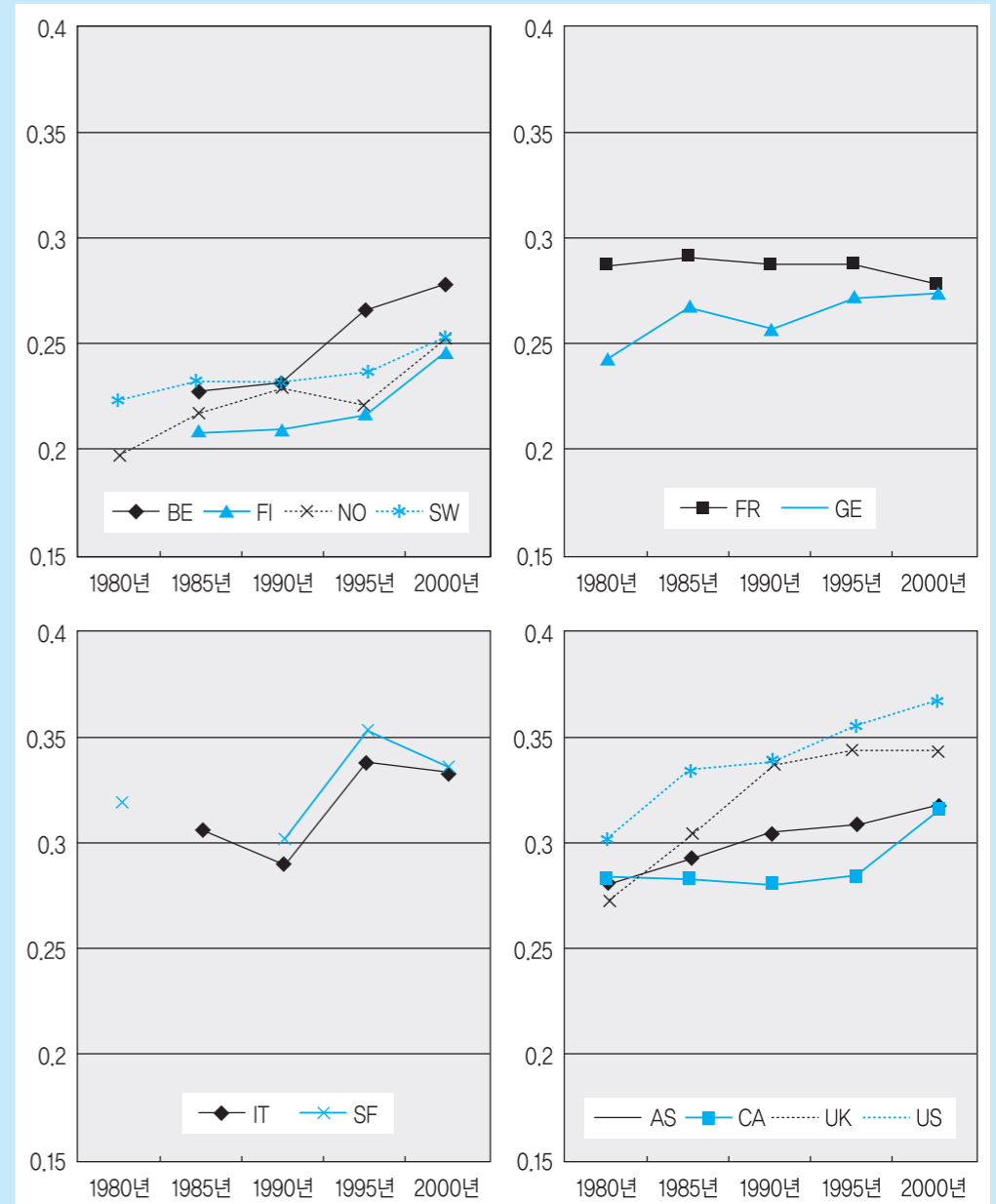
1980년대 값은 1985년 전후와 1990년 전후 값의 평균값, 1990년대 값은 1995년 전후와 2000년 전후 값의 평균값임.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재정리

1) Abrahamson(1999)은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복지레짐(사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을 좀 더 세련화하여, 스칸디나비아, 비스마르키안, 지중해연안, 앵글로색슨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근대적(modern), 제도적(institutional), 초보적인(rudimentary), 잔여적인(residual)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강한 가톨릭적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국가들은 사회복지의 제도화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독일 등의 조합주의 복지국가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Social Services Highlight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불평등(지니계수) 동향



원자료: LIS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민주의 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높은 노조조직률에 기반한 북유럽 국가와 조합주의가 강한 서유럽 국가들이, 가톨릭적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남유럽 국가와 자유주의가 강한 북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대표적인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서도 1980년 이래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불평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독일과 특히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불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 라틴계 국가들의 경우 1990에서 1995년 사이 불평등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영국,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 역시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요컨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틀어 복지국가의 고유한 레짐별 특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소득불평등 증가에 대한 몇 가지 설명

그렇다면, 이러한 1980년대 이래 복지국가의 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먼저, 노동의 사회적·공간적 분화 및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주요 OECD 국가에서는 많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부문으로부터 약간의 고임금과 많은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부문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경험하였다(Lavy 1992²⁾ (아래 [그림 2] 참조). 소위 “탈산업화”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팽창은 한편으로 고숙련, 고임금의 전문직 및 경영직과, 다른 한편으로 저숙련, 저임금의 일자리로 점점 더 양분화된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소득분포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Pinch 1993; Harrison and Bluestone 1988). 즉, 제조업 분야는 비교적 등질적이고 안정적인 - 노조조직률이 높은 서유럽의 경우 조직적이기까지 한 - 일자리를 제공하는 반면,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비균질적이고 불안정하며 비조직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의 공간적 이동, 즉 저임금 일자리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제3세계 근로자의 유입(immigration)은 자국 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업률을 증가시킴으로써 하위 소득자의 소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서비스업 팽창과 저소득 일자리의 경쟁력 약화 결과로 미국은 직종과 소득 스펙트럼에서 최상층과 최하층 모두 상대적으로 증가

2) Sassen(1984, 1985, 1991)은 노동의 사회적 공간적 분화에서의 변화는 경제활동 구조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는 특히 금융 및 기업서비스의 성장 및 제조업 하락과 관련이 있다. 그녀는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 분야보다 훨씬 더 양극화된 직종 및 소득분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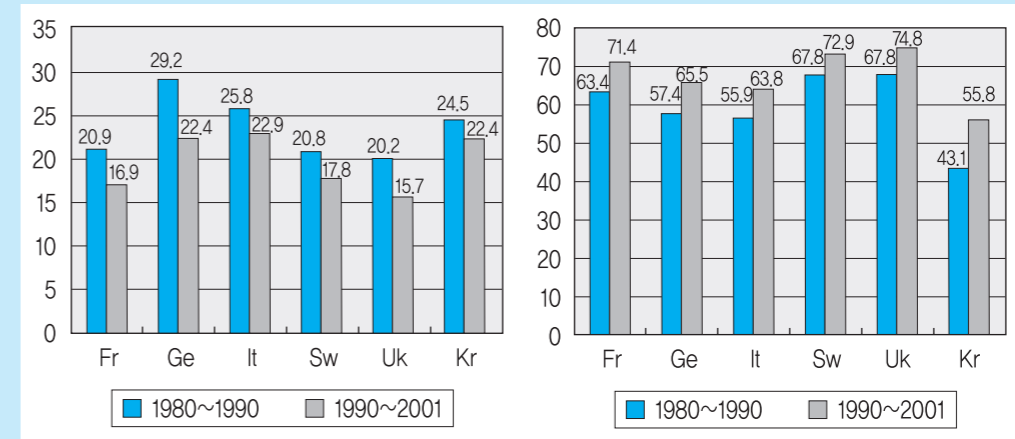
Social Services Highlight

한 이른바 “중산층 위축”(shrinking middle)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둘 이상의 소득자를 가진 안정된 “중산층 다수”의 가구와 소득이 없는 잔여화된(residualised) 집단 간에 소득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된다(Pahl, 1988).

다음으로, 최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지구화의 불가피한 추세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 나면서 자국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입지가 더욱 약해져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고영선 2006). 그러나 지구

화의 영향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근본적이면서 지대한 효과를 발휘해 왔다. 지구화는 복지국가의 정책에 실질적인 제약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국가의 능력과 정책자율성이 현대 지구경제의 ‘외적’ 힘에 의해 부식되어 왔다는 것이다. 스트리커(Stryker, 1998:8-9)는 지구경제가 국가정책을 제약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 지구화는 모든 형태의 자본(국내자본과 해외자본)에 대한 국가의 구조적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둘째, 지구화된 금융 및 생산자본은 자본 이동의 위협과 위험을 증가시킨다³⁾. 셋째, 금융통합은 국민국가가 실업을

그림 2. 주요 OECD 국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원자료: Wöfl(2005)

3) 카이트(Kite, 2002)는 스트리커의 두 번째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지구화가 자본의 ‘퇴거’(exit)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권한이 강화되었음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지구화는 국가가 관대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인상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자본 퇴거의 위협과 새로운 자본유입의 유인 제공을 위해, 정부는 조세부담 및 규제기준 등과 관련해서 ‘끌어내리기 경쟁’(race to the bottom)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완충하기 위해 팽창적 경제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긴축재정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지구경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국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지구화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초국적 확산을 가속화시킨다. 즉, 국가 수준에서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형성의 완전한 불능성 혹은 완고성을 강조하고, 정부로 하여금 지구경제의 구조, 작동, 혹은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경쟁력의 요구(무역장벽의 감소 혹은 제거, 국가·세금·복지의 규모 혹은 비용 감소 등에 순응해야만 한다고 믿게끔 부추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화가 국민국가에 부여하는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카이트(Kite, 2002)는 지구화로 인한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약화에 주목한다. 즉, 좌파정당은 우파정당이 제기하는 ‘국제시장의 불가피성’ 명제를 성공적으로 반박할 적절한 명분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화는 노동계급 연대를 침식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컨대, 이러한 지구화의 영향은 연대임금, 최저임금제도, 누진세제 등 평등주의적 정책에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근

로조건 등의 유연화(flexibility)를 추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Dreher & Gaston(2008)의 최근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구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통틀어서 소득 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악화에 가장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 -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노동유연화, 노조조직력과 시민주의 세력의 약화, 복지국가에 대한 컨센서스 약화, 국민국가의 정책결정력의 제약 등 - 로 1980년대 이래 복지제도와 이를 떠받치는 누진세제가 축소되거나 조정됨으로써 재분배기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다.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은 일차적으로 시장소득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차적으로 조세와 사회복지지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⁴⁾.

OECD 국가들의 조세구조(tax mix)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공통적인 경향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 조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세와 부가가치세(VAT)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OECD 2008)⁵⁾.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가장 누진적인 세제이고, 소

4) 실제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과 공적이전이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줄여주는 비율은 스웨덴의 경우 각각 -65%p와 -14%p, 독일의 경우 각각 -61%p와 -7%p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미국의 경우도 각각 -45%p와 -2%p에 이른다(여유진 외 2005).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축소와 세제 개혁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예외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부동산, 순자산, 유산 및 증여에 대한 세금)는 상당히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감소하였다(OECD 2008). 프랑스에서는 1981~1986년, 1988~1993년, 1997~2002년 동안 사회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책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조스팽은 ‘제3의 길’에도 동조하지 않을 만큼 좌파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힘썼다. 프랑스가 1980년대와 90년대 동안 매우 예외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은 것은 누진세제 강화, 주35시간 노동제 실시 등의 좌파 정책과 것으로 보인다.

Social Services Highlight

비세, 그 중에서도 일반소비세가 가장 역진적인 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비록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축소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1980년대 이후 개별 제도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여러 형태의 삭감이 있었다(감정기 외 2002). 이러한 복지급여의 삭감은 특히 단기간 혹은 장기간 동안 시장을 통한 소득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복지의 주요한 고객(client)인 노인, 장애인, 실업자, 한부모가구 등의 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요인 - 산업구조의 변화, 지구화, 복지국가재분배기능의 약화 - 는 독립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가보다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1970년대

중반 이래 서구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개발도상국(NIEs)의 추격은 MEMicro Electronics) 혁명으로 인한 정보산업화와 JIT(Just In Time 또는 Lean) 생산방식으로 인한 생산혁신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정보산업화와 생산방식의 혁신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구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가속화된 산업구조 변화와 지구화된 경제는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부식시키면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기존의 안정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평등주의적 분배·재분배 정책을 추구하던 북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한편, 자유주의 국가로 하여금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동함으로써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표 2. OECD 국가들의 조세구조¹⁾

	1965	1975	1985	1995	2004
개인소득세	26	30	30	27	25
법인세	9	8	8	8	10
사회보장기여금 ²⁾	18	22	22	25	26
(피용자)	(6)	(7)	(7)	(8)	(9)
(고용주)	(10)	(14)	(14)	(14)	(15)
인두세	1	1	1	1	1
재산세	8	6	5	6	6
일반소비세	14	14	16	18	19
특별소비세	24	18	16	13	11
기타 세금 ³⁾	1	1	1	3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주: 1) 총 조세에서 각 조세의 비율
 2) 피용자와 고용주가 아닌 자영자와 급여수급자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기여금도 포함됨.
 3)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특정 세금과 인지세 등이 포함됨.
 자료: OECD(2008)

표 3. OECD 국가의 복지급여 삭감

급여형태	변경사항	예
노령연금	퇴직연령 높임 완전연금수혜자격 기간의 증가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급여를 인상하는 근거 마련 연금의 소득심사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수
장애	보다 엄격한 장애(무능력) 심사 새로운 기간 제한, 급여축소	영국,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네덜란드
실업	급여기간 축소 급여수준 감소 자격 축소	벨기에, 영국, 덴마크, 미국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가족수당	실질 가치를 감소 또는 자격 축소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자료: Pierson(1998), p.254; 감정기 외(200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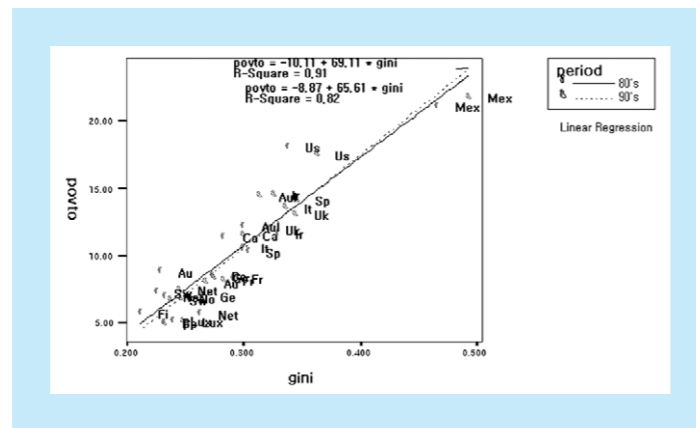
소득분배 상황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전망: 지구화의 제약과 정책적 유산

지금까지 주요 OECD 국가들에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여 왔으며, 서비스 산업의 팽창으로 인한 일자리의 양극화, 지구화로 인한 저임금 일자리의 경쟁력 저하와 조합주의적 정책추진력 약화, 그리고 재분배적 복지정책 기조의 쇠퇴 등이 이러한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 레짐별 분배 지표는 여전히 유효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래 [그림 3]에서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틀어 빈곤과 불평등은 정비례 관계, 즉 스칸디나비아모

그림 3. 빈곤과 불평등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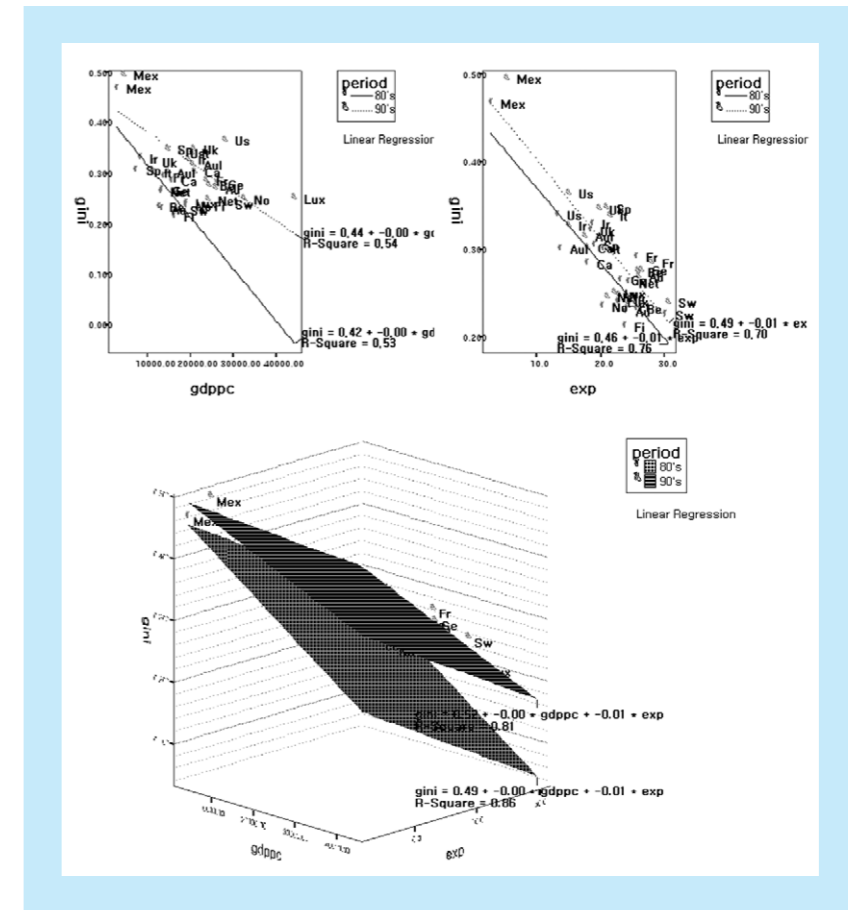


원자료: LIS

텔은 매우 낮은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를 유지하는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증가 추세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자

유주의 국가들 간의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또는 앞으로도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지만 여전히 레짐별 차이는 유지될 것인가 혹은 수렴할 것인가? 전자를 보편성(구조적 제약성) 요인, 후자를 특수성(경로의존성) 요인으로 구분할 때 이 두 요인 중 어떠한

그림 4. 경제성장, 사회지출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주: GDPPC: 1인당 GDP(명목, 미국 달러 기준), EXP: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 GINI: 지니계수
원자료: UN(GDPPC), OECD(EXP), LIS(GINI)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요인이 향후 소득불평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매우 과대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편성(구조적 제약)을 각 나라의 경제 수준, 즉 1인당 GDP로 보고, 특수성(경로의존성)을 기존 사회지출 수준으로 인한 불가역성으로 볼 때 이 두 요인과 지니계수와의 관계는 [그림 4]와 같다. 먼저, 1인당 GDP의 수준과 사회지출 수준 모두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1인당 GDP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더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수준보다 사회지출 수준의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력(R-square)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지출의 경우 1990년대의 회귀선은 1980년대에 비해 올라갔지만 기울기는 거의 유사하다. 즉, 사회지출 수준의 증감이 지니계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두 기간 동안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절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동일한 사회지출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지니계수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1인당 GDP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즉, 1인당 GDP의 증감에 따른 지니계수 증감의 폭이 1980년대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에 따른 불평등 감소는 1980년대에 비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역으로, 불

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최근 들어 경제성장이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지는 친평등적(pro-equality) 성장을 달성하기 더욱 어려운 국제적 환경에 처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동일한 평등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예전보다 더 높은 사회적 자원(사회지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경로의존적 발달의 기초는 비교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북서부 유럽(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스마르키안 국가들)의 경우 지구화된 경제 하에서 전통적인 계급의식과 계급 결속력은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일부 복지제도의 후퇴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역사적 경험에서 체득된 보편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복지동맹'이 비교적 공고할 것임을 의미한다⁶⁾. 이에 비해, 잔여주의적이고 이분화된 자유주의 전통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댓가로 평등을 다소 희생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경로가 더 바람직한가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해 양분화된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상(像)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고민은 다시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6) 다만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사회·외교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유럽통합은 유럽국가의 사회복지와 빈곤·불평등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따라서 유럽통합이 각 국가별, 레짐별 복지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또 다른 주요한 논쟁거리다.

Social Services Highlight

■■■ 참고문헌

- 감정기·최원규·진재문(2002)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사.
- 고영선(2006) “세계화와 소득재분배 정책: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화의 과장과 경제정책』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 자료집.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brahamson, Peter(1999) “The Welfare Modelling Busines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33, No. 4, pp.394-415.
- Dreher, Axel & Noel Gaston(2008) “Has Globalization Increased Inequality?”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 Kite, Cynthia(2002) “The Globalized, Generous Welfare State: Possibility or Oxymor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3): 307-344.
- Levy, Frank. & Richard J. Murnane(1992) “U.S. Earnings Levels and Earnings Inequality: A Review of Recent Trends and Proposed Explan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XXX, pp.1333-1381
- Harrison, B., and Blueston, B.(1988) *The Great U-Tur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Polarizing of America*, NY: Basic Books.
- Hmnett, C. & D. Cross(1998) “Social Change, Social Polaris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London, 1979-1993” *GeoJournal*, Vol46, pp.39-50.
- MacPhail, Fiona(1998) “Increased Earnings Inequality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Canada in the 1980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12, No.3(Sep).
- OECD(2008) *Tax and Economic Growth*, ECO/CPE/WPI(2008)4.
- Pahl, R.(1988) “Wome Remarks on Informal Work, Social Polarization and the Social Stru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Regional Research*, Vol.12, pp.247-267.
- Pinch, S.(1993) “Social Polarization: A Comparison of Evidence from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lanning A*, Vol.A25, pp.779-795.
- Polanyi, Karl(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화: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기원』 민음사.
- Wolfl, Anita(2005)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STI Working Paper* 2005/3 OECD. [GSST](#)